

개정 부속법률 자료(2016.2.19. 수정본)

- 2015.12.3. 기본강의 헌법(2015년판) 추록을 게재하였는데, 그 이후 개정된 부속법률과 당시 누락된 조항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면수는 2015년판 기준이고, 2016년판 소지자도 함께 필요한 경우 ★처리하고 괄호안에 면수를 표시하였습니다.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16.1.27.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사법시험 후인 2016.2.28.이므로 제외하였습니다. 심신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든 시기일텐데 합격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까지 건투를 빕니다!!!

- 金 柳 香

★ 제304면(2016년판 제297면)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7항, 제8조의 2 신설(2016.2.3.)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⑦ 위원은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2.3.>

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2.3.>

제8조의2(위원의 책임 면제)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[본조신설 2016.2.3.]

★ 제944면(2016년판 제946면) 공선법 제57조의8 신설(2016.1.15.)

제57조의8(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)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(이하 "안심번호"라 한다)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(이하 "안심번호 제공 요청서"라 한다)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

2.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

②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·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.

★ 제964면(2016년판 966면)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(2016.1.15.)

제6조(후원회지정권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후원회지정권자"라 한다)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.

5.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(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)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(이하 "당대표경선후보자등"이라 한다)

★ 제970면(2016년판 971면) 정치자금법 제26조 제2항, 제26조의2 제2항 개정(2016.1.15.)

<p>제26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) ②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·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 <개정 2006.4.28., 2016.1.15.></p> <p>1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</p> <p>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<u>100분의 40</u>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, 총액의 <u>100분의 40</u>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(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. 이하 "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"이라 한다)에 따라, <u>그 잔여분</u>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</p> <p>제26조의2(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)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·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5.></p> <p>1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</p> <p>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<u>100분의 40</u>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, 총액의 <u>100분의 40</u>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, <u>그 잔여분</u>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</p>	
---	--

★ 제972, 973면(2016년판 973, 974면)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박스 내용 수정

여성후보자를 30%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40%</u> →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 ■ <u>40%</u> →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 ■ <u>잔여분</u> →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	
여성후보자를 30%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	1. 15%이상 30%미만 추천한 정당	(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)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
	2. 5%이상 15%미만 추천한 정당	(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)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(다만,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1.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)
장애인후보자를 5%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40%</u> →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 ■ <u>40%</u> →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 ■ <u>잔여분</u> →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 	
장애인후보자를 5%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	1. 3%이상 5%미만 추천한 정당	(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)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
	2. 1%이상 3%미만 추천한 정당	(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)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(다만,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1.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★ 제988면(2016년판 988면) 공선법 제53조 제2항 개정(2015.8.13.)

- 종래 “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” → 개정법 “선거일 전 30일까지”

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선거일 전 30일까지</u>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1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2.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
3.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4.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★ 제989면(2016년판 989면) 공선법 개정에 따른 박스 내용 수정

	대통령선거	국회의원선거	지방자치단체장선거	지방의회의원선거
(1) 국회의원	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원칙)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■ (예외) 비례대표의원의 보궐선거입후보-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 	<u>선거일 전 30일까지</u> 사직	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
(2) 지방자치단체장	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원칙)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 ■ (예외)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경우-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해 지방-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■ 다른 지방-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해 지방-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■ 다른 지방-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
(3) 지방의회 의원	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	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해 지방-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■ 다른 지방- <u>선거일 전 30일까지</u> 사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해 지방-(원칙)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, (예외) 비례대표의원의 보궐선거입후보-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 ■ 다른 지방- <u>선거일 전 30일까지</u> 사직

※ 제1042면 공선법 제108조 제3항 개정(2015.12.24.)

- 종래 “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” → 개정법 “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”

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(공표·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)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, 표본의 크기, 조사지역·일시·방법,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4.>

3. 「방송법」 제2조(용어의 정의)에 따른 방송사업자

4. 전국 또는 시·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

7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

※ 제1053면 공선법 개정(2015.12.24.)

- 2015.12.24. 개정법에서는 ①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(제218조의4, 제218조의5 등),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(제218조의5, 제218조의6 등)하고, ③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미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함(제218조의8 등)으로써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고 하였다.

제218조의5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 “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”이라 한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8.13., 2015.12.24.>

1.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.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(본인의 배우자와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2.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.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.

3.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.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24.>

제218조의8(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)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24.>

★ 제1359면(2016년판 1343면)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개정(2016.1.15.)

제8조(위원의 임기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. 다만,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★ 제1361면(2016년판 1345면)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개정(2016.1.15.)

제17조(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)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·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1. 선거·국민투표·정당관계법률
2. 주민투표·주민소환관계법률.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.